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목 차>

1.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
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심원태
	담당부서 (과)	금융혁신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전요섭		연락처	02-2100-2534
	과장	이석란		이메일	wtsim@korea.kr

2023. 12. 11. 작성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요섭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		
	2.규제 조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3.위임법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7조, 제8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3. 12. 11. ~ '24. 1. 22. (42일간)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율을 마련할 필요 		
	7.규제내용	<p>1.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p> <p><input type="checkbox"/>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시행령 제5조 및 규정 제4조·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기관 등에 대해 예치금의 운용 제한, 지급절차 등의 의무를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 예치금 관리기관을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으로 규정하고,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예치금의 범위를 규정 - 관리기관에 대해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신의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예치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 대해서만 운용하도록 규정 - 이용자 예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즉시 관리기관에 해당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 - 관리기관이 이용자 예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절차와 지급액, 공고방법을 규정 <p><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시행령 제6조, 규정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인터넷 분리보관 의무를 부과 -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 		

		<input type="checkbox"/>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한 준비금 등 적립(시행령 제7조, 규정 제10조)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 ○ (피규제집단) 가상자산사업자 ○ (이해관계자) 가상자산이용자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td>가상자산사업자</td><td>37개 가상자산사업자 (27개 거래업자, 10개 지갑·보관업자)</td></tr> <tr> <td>이해관계자</td><td>가상자산이용자 등</td><td>약 606만명(중복포함)</td></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가상자산사업자	37개 가상자산사업자 (27개 거래업자, 10개 지갑·보관업자)	이해관계자	가상자산이용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가상자산사업자	37개 가상자산사업자 (27개 거래업자, 10개 지갑·보관업자)										
이해관계자	가상자산이용자 등	약 606만명(중복포함)										
	9.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을 확립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 용	편 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 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 일 몰 설 정 여부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14. 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 용	편 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p> <p><u><신 설></u></p>	<p>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p> <p><u>제5조(예치금의 예치 또는 신탁) ①</u></p> <p><u>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u> <u>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u> <u>관을 말한다.</u></p> <p><u>1. 「은행법」에 따른 은행</u></p> <p><u>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u> <u>협은행</u></p> <p><u>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u> <u>수협은행</u></p> <p><u>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u> <u>소기업은행</u></p> <p><u>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u> <u>이 정하는 방법”이란 제1호의 금</u> <u>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u> <u>100분의 100 이상을 관리기관에</u> <u>예치 또는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u></p> <p><u>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이용자의 예치금</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u> <u>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u> <u>한 금액</u></p> <p><u>2. 각종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u> <u>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u></p>

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③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관리기관이 예치 또는 신탁하고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가상자산사업자(법 제6조제4항 제1호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는 법 제6조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이 법 제6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⑧ 관리기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6조제4항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을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치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관리기관의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4.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신 설>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할 것.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이용자의 예치금 지급·지급보류, 이용료, 예치 또는 신탁의 주기 등 예치금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가상자산의 보관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1. 이용자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 할 것

2.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

3.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전부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4.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않을 것

5. 그 밖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보관 방

<신 설>

법과 절차, 위탁보관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보험의 가입 등)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가상자산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접근매체”라 한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거래지시 또는 가상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 매매 등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신 설>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가상자산을 위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침해사고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4조(예치금의 운용) 영 제5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

<신 설>

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제7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신 설>

<신 설>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영 제6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을 매월 산정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의 가입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8조에 따라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을 곱한 금액의 총합)에서 법 제
7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
하여 보관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30억원. 다만,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
우에는 5억원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
우 보상한도는 제1항에 따라 산
정된 경제적 가치 이상을 유지할
것

2.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제1항
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고 책임이행이 신속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관리
및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
립하여 운영할 것

3. 가상자산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
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보
상한도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서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차
감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 또는 적립
액을 매월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
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
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함

** (이용자 예치금) 약 4.0조원, (이용자 가상자산(원화환산액)) 28.4조원 ('23.상반기 기준)

-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일부 보호조치가 적용
 - 다만, 동 법은 자금세탁방지를 1차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규율체계가 마련될 필요
 -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예치금의 이용(운용) 대가인 예치금이용료 또한 이용자에게 지급될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상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관련 규정 >

- (예치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법 제8조)
-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법 제7조제3항)
 - 신고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요구
 - 동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개선방안

- (예치금)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관리방법을 정하고, 사업자 파산선고 등의 경우 예치금 지급절차, 예치금이용료의 이용자 지급 등 규정
- ①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 예치금을 예탁할 수 있는 관리기관으로 은행을 규정(제5조제1항)

- ②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 운용*(제5조제3항 등)

* 운용방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에탁금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용

- ①국채·지방채증권의 매수, ②정부·지자체 또는 은행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수, ③원화표시양도성예금증서 담보 대출, ④한국은행 예치, ⑤특수채(한전채 등) 매수, ⑥은행채 또는 주금공 MBS 매입, ⑦RP거래, ⑧은행의 예금가입 등

- ③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이용자 예치금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를 가상자산사업자의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제한(제5조제5항)

- ④ 사업자 파산선고 등 예치금의 이용자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사업자로부터 예치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다음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제5조제6항부터 제8항)

- ⑤ 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대가를 지급(규정 제7조)

- (가상자산)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 규정

- ①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콜드월렛)하여야 하는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이상으로 규정**(제6조제1항, 규정 제9조제1항)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 동 기준에 따른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을 매월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

-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의 보안기준을 구체화*(제6조제2항)

* ①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공시, ②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 실질보유, ③위탁받은 가상자산은 전부 콜드월렛에 보관, ④재위탁 금지 등

- ③ 사업자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의 범위 구체화*(제7조)

* 접근매체의 위·변조사고, 계약체결·거래지시 등에 관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가상자산을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침해사고 등

- ④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준비금 등으로 적립*

* 다만, 동 금액이 30억원(원화마켓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 적립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
	내용	① 이용자 예치금을 관리기관인 은행에 보관 ② 예치금을 안전 자산에 운용하고, 이용료 지급 ③ 이용자 가상자산 일정비율 이상을 콜드월렛 보관 ④ 해킹 등 사고 발생시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 적립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현행 유지

○ 규제대안의 비교

1) 규제대안1 :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

- (예치금 보호)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고, 국채 안전한 자산에 운용하도록 하여 이용자 자산 보호
- (가상자산 보관) 이용자의 핵심 자산인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

2) 규제대안2 : 현행 유지

-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사고 등 발생시 일반 국민인 이용자의 큰 피해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23.7.18일 ➡ '24.7.19일 시행)

- 국회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 마련하여 법 제정(7.18일)
- 법 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보호 필요성과 규율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 민간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22.8월부터 운영하여 시행령 등 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및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금감원, 한국은행 참여

□ 국회 등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대한변협 등 공동 개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세미나 (10.6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개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심포지엄 (10.24일) 등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 마련 필요

-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을 확립

3. 규제목표

-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보관 및 관리방식을 준용하여 이용자 예치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콜드월렛과 준비금 모두 보관비율을 규정하여 사업자가 상황에 맞게 규제를 준수할 수 있어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예치금 관리) EU는 고객 자금의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IOSCO도 사업자의 고객 자금 신탁 및 분리보관 등을 권고
- (EU) MiCA*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고객 자금의 소유권 보호, 관리기관 및 예치 시점, 서비스제공자 계정과의 별도 보관 등을 규정

*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24.6월 시행 예정)

< EU MiCA Article 70 >

Safekeeping of clients' crypto-assets and funds

2. Where their business models or the crypto-asset services require holding clients' funds other than e-money tokens,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shall have adequate arrangements in place to safeguard the ownership rights of clients and prevent the use of clients' funds for their own account.
3.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shall, by the end of the business day following the day on which clients' funds other than e-money tokens were received, place those funds with a credit institution or a central bank.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clients' funds other than e-money tokens held with a credit institution or a central bank are held in an account separately identifiable from any accounts used to hold funds belonging to the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 (IOSCO)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 ('23.11월)에서 ❶고객 자산의 신탁 또는 고유재산과 분리, ❷고객 자산 분실, 도난 등 위험 완화를 위한 시스템·정책·절차 도입 등을 권고

< Recommendation 13 : Segregation and Handling of Client Monies and Assets >

- 규제당국은 CASP(Crypto-Asset Service Providers)가 고객 자산을 신탁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CASP의 고유재산에서 분리하도록 요구해야 함

< Recommendation 16 : Securing client money and assets >

- 규제당국은 CASP가 고객 자산의 분실, 도난 또는 접근불가능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도입하도록 요구해야 함

※ 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and Digital Asset Markets Final Report (IOSCO, '23.11월)

- (콜드월렛 보관) 일본은 자금결제법 등*에서 암호자산교환업자가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❶자신의 암호자산(고유재산)과 분리하여 ❷이용자 보호 부족 우려가 적은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자금결제법 제63조의11 및 암호자산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제27조제2항, 제3항

** 상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지 않은 전자기기, 전자적 기록매체 및 기타 기록매체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

- 이용자 편의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필요 최소한의 암호자산*은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허용

* 해당 암호자산 엔화 환산액 < 관리하는 이용자 암호자산 엔화 환산액 100분의 5

- (위탁 보관) EU의 MiCA는 제75조제9항에서 암호자산 보관·관리 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서비스제공자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가받은 서비스제공자 이용 의무를 규정

< EU MiCA Article 70 >

Providing custody and administration of crypto-assets on behalf of clients

9. If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providing custody and administration of crypto-assets on behalf of clients make use of othe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of that service, they shall only make use of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authori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providing custody and administration of crypto-assets on behalf of clients and that make use of othe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of that service shall inform their clients thereof.

- (보험 가입 등) EU의 MiCA는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가 두 가지 형태*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으로 건전성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

* ①보통주 1등급 항목과 금융상품들로 구성된 자기 자금

②암호자산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영토를 커버하는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

< EU MiCA Article 67 >

Prudential requirements

1.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shall, at all times, have in place prudential safeguards equal to an amount of at least the higher of the following:

(a) the amount of permanent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indicated in Annex IV,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crypto-asset services provided;

(b) one quarter of the fixed overheads of the preceding year, reviewed annually.

4. The prudential safeguard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take any of the following forms or a combination thereof:

(a) 생략

(b) an insurance policy covering the territories of the Union where crypto-asset services are provided or a comparable guarantee.

< EU MiCA Annex IV >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FO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인가단위	수행가능한 서비스 유형	최소 자기자본요건
class 1	- 주문집행업, 인수·주선업, 이전업, 주문접수·전송업, 자문업, 일임업	50,000 유로
class 2	- class 1 - 교환업(암호자산→자금), 교환업(암호자산 간), 보관·관리업	125,000 유로
class 3	- class 2 - 플랫폼 운영업	150,000 유로

o 유사입법사례

- (예치금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마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사례 : 공신력 있는 기관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아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4~7. (생략)

< 특정금융정보법 사례 :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자본시장법 사례 : 예탁금 운용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4조) ⑫**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자본시장법 사례 : 예탁금 양도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2조)**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융투자업자(이하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예치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 3.~4. (생략)

< 자본시장법 사례 : 예탁금 지급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3조) ①**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투자자 및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 (위탁 보관 등)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사례 : 사고 발생 시 책임 >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정보통신망법 사례 : 침해사고 >

- **(정보통신망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6. (생략)
 -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42조 >

- (제22조 :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금감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3. 종합결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2.규제조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3조, 제15조											
	3.위임법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 제13조, 제1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3. 12. 11. ~ '24. 1. 22. (42일간)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의 기본이 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존 필요											
	7.규제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input type="checkbox"/> 시행령 제8조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보존의무가 부과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등을 규정 - 과세,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등의 목적으로 보존의무가 부과되는 거래기록의 종류와 보존방법, 보존장소 등을 규정 <input type="checkbox"/> 시행령 제13조, 제15조 ○ 조치명령권 및 영업정지 등 제재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발행자 등으로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div>○ (피규제집단) 가상자산사업자 ○ (이해관계자) 가상자산이용자 등</div>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가상자산사업자</td><td>37개 가상자산사업자 (27개 거래업자, 10개 지갑·보관업자)</td></tr><tr><td>이해관계자</td><td>가상자산이용자 등</td><td>약 606만명(중복포함)</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가상자산사업자	37개 가상자산사업자 (27개 거래업자, 10개 지갑·보관업자)	이해관계자	가상자산이용자 등	약 606만명(중복포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가상자산사업자	37개 가상자산사업자 (27개 거래업자, 10개 지갑·보관업자)											
이해관계자	가상자산이용자 등	약 606만명(중복포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 거래기록 보존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치명령권 등 조치의 대상을 명확하게하여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u><신 설></u>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u>제8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가상자산거래의 거래자 정보 및 거래대상 가상자산</u> <u>2. 가상자산거래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제출한 호가를 포함한다)</u> <u>3. 가상자산거래의 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u> <u>4.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u> <u>5.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u> <u>6. 해당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u> <u>7. 가상자산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u> <u>8. 법 제11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 차단 기록 및</u>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자료

9. 법 제12조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 상시 감시 및 조
치결과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
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
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통보 및 수사기관 신
고(신고 사실에 대한 금융
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 보
고를 포함한다) 내역

10. 그 밖에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
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항의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서면, 마이
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
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
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⑤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

<신 설>

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검사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2. 가상자산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가상자산을 위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을 개발·운영하는 자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등
4.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2호

<신 설>

부터 제4호까지의 자로부터 업
무를 위탁받은 자

5.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과 관
련하여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 운
영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거래한도, 가상자산
의 거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3조제1
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거래 기록 등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 보존 등이 필수
 - 거래기록은 거래오류 발생시 확인·정정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보존될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감독업무 수행이 필수적
 -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에 조치명령권 및 제재권(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범위를 위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조치명령권 >

☐ 「자본시장법」에 도입되어 있는 조치명령권의 내용을 준용

-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 급변하는 가상자산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예비적·보충적 조치수단

※ 자본시장에서도 舊「증권거래법」시절부터 '08년 리먼브러더스 사건, '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의 경우에 총 3차례 행사

☐ 개선방안

- (거래기록 보존의무) 거래자·가상자산 종류·수량·금액·거래 상대방 등 정보*에 대해 거래 종료시부터 15년간 보존의무를 부과

* 호가정보, 거래일시, 거래에 사용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식별번호, 가상자산 주소, 수수료, 접속기록, 거래신청 및 조건변경, 법 제11조의 입·출금 차단기록 및 사유, 법 제12조 이상거래 감시 및 조치결과 등

- 거래관계가 종료된 때의 기준은 법령, 약관 또는 합의에 따라
①계약기관의 만료, ②해지·해제권 행사, ③변제 등 채권의 소멸
등을 사유로 종료된 날을 말함

○ **(이해관계자의 범위)** 조치의 도입 취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 명령권 및 제재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규정

- 가상자산 발행자, 가상자산 네트워크 운영자,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계정을 운영하는 금융회사 등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가상자산 거래기록 보존의무 등 부과
	내용	① 보존의 대상이 되는 거래기록 규정 ②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범위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현행 유지

○ 규제대안의 비교

1) 규제대안1 : 가상자산 거래기록 보존의무 등 부과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필수적인 자료인 거래기록 확보 가능

2) 규제대안2 : 현행 유지

-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 등이 사실상 불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23.7.18일 ➡ '24.7.19일 시행)

- 국회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 마련하여 법 제정(7.18일)
- 법 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의 필요성과 규율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 민간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22.8월부터 운영하여 시행령 등 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및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금감원, 한국은행 참여

□ 국회 등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대한변협 등 공동 개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세미나 (10.6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개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심포지엄 (10.24일) 등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규제대안1이 바람직

- 가상자산 거래기록 등에 대한 검사,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능

3. 규제목표

-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영업과 관련된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용이한 점에 비해 거래기록이 감독, 검사 등에 필수적인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가상자산 거래기록) FSB는 「가상자산 활동 및 시장 규제·감독 관련 상위수준 권고사항」(23.7월)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데이터 수집, 기록 및 보고를 요구할 것 등을 권고

< Recommendation 6 : Data collection, recording and reporting >

- 당국은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를 수집, 저장, 보호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함
 - * 시스템, 프로세스, 정책, 절차, 인프라 등
- 당국은 규제·감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Crypto-Asset Activities and Markets(FSB, '23.7월)

- (감독·검사) IOSCO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23.11월)에서 사기 및 시장 남용에 대한 규제당국의 집행조치를 권고

< Recommendation 8 : Fraud and Market Abuse >

- 규제당국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정도를 고려하여 가상자산의 사기 및 시장 남용 범죄*에 대해 집행조치(enforcement actions)를 취해야 함
 - *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및 내부 정보의 불법공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거짓 및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 자금 유용 등 관련 모든 사기 및 남용행위

○ 타법사례

- (가상자산 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사례 : 거래 기록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생략)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④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 ④금융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⑤ 금융회사등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 (감독·검사) 자본시장법상 조치명령권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

< 자본시장법 사례 : 감독·검사 >

- (자본시장법 제416조)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7. (생략)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9조) ① 법 제4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6조제9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 11. (생략)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으로 적극적 이행 기대

-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금감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3. 종합결론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거래기록 보존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치명령권의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규제조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3.위임법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12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3. 12. 11. ~ '24. 1. 22. (42일간)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법 제10조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함 ○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해야 하는 이상거래의 정의를 규정 		
	7.규제내용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input type="checkbox"/>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금지 예외(시행령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등 금지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함(제10조제1항) ○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착오 입금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제10조제2항) ○ 법 제10조제5항각호에 따라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하고, 그 내역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 <input type="checkbox"/> 이상거래의 정의(시행령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하여야 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집단) 가상자산사업자 ○ (이해관계자) 가상자산이용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가상자산사업자	37개 가상자산사업자 (27개 거래업자, 10개 지갑·보관업자)			
		이해관계자	가상자산이용자 등	약 606만명(중복포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 용	편 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 몰 설 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 용	편 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p> <p>＜신 설＞</p>	<p>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p> <p><u>제10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예외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u></p> <p><u>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착오 입금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즉시 반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u>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u></p> <p><u>1.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u></p> <p><u>·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시할 것</u></p> <p><u>가.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u></p>

<신 설>

나. 가상자산 취득 사유(제2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사유가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과 이를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 담당 임원이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다.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라. 처분 계획

2. 관련 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매 때,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법 제1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2.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
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
칠 염려가 있는 경우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예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법 제10조제5항)
 - 다만,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함
- **(이상거래 감시의무)**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함
 - 이에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인 이상거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감시하도록 할 필요

☐ 개선방안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예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착오 입금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되, 즉시 반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제10조제2항)
 - 법 제10조제5항각호에 따라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하고, 그 내역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
- **(이상거래 감시의무)**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하여야 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제12조)
 -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내용	❶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 규정 ❷ 이상거래의 정의를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현행 유지

○ 규제대안의 비교

1) 규제대안1 :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 등 규정

- 착오 입금 등 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여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자본시장법」상 이상거래의 정의를 준용하여 이상거래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이상거래 감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

2) 규제대안2 : 현행 유지

- 착오 입금 등을 예외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거래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23.7.18일 ➡ '24.7.19일 시행)

- 국회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 마련하여 법 제정(7.18일)

- 법 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율 필요성과 규율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짐

- 민간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22.8월부터 운영하여 시행령 등 제정안 마련시 다양한 의견 수렴

*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및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금감원, 한국은행 참여

- 국회 등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대한변협 등 공동 개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세미나 (10.6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개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심포지엄 (10.24일) 등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규제대안1이 바람직

-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매매 등을 금지하되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현재 작동 중인 「자본시장법」상 시장감시 체계를 준용하여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시장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

3. 규제목표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행위의 예외를 규정하고,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운영 중인 체계를 반영하여 이상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IOSCO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23.11월)에서 이해상충 관리·완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가상

자산의 상장 및 거래 촉진 금지 등의 필요성을 제시

< Recommendation 7 : Management of Primary Markets Conflicts >

- 규제당국은 CASP(Crypto-Asset Service Providers)가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 및 상장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완화하도록 요구해야 함
- 여기에는 적절한 공개 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체 소유 가상자산 및 CASP 또는 계열사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및/또는 거래 촉진 금지가 필요할 수 있음

- (이상거래 감시) EU는 사업자의 시장 남용 식별 및 통보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IOSCO도 사업자에 시장 감시의무 적용을 권고

- (EU) MiCA 제76조제8항에서 암호자산 거래플랫폼 운영자가 시장남용 또는 시도된 시장남용 사례를 식별하는 경우 주무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제92조제1항에서 암호자산 트랜잭션을 전문적으로 주선 또는 실행하는 자의 ①시장남용 행위 방지·적발을 위한 효과적인 체제·시스템·절차 마련과 ②시장남용 행위 관련 주무당국 보고의무를 규정

- (IOSCO)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23.11월)에서 규제당국이 시장 남용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각 CASP에 시장 감시의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

※ Recommendation 9 : Market Surveillance

○ 유사입법사례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일하게 특금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

< 특정금융정보법 사례 : 자기발행 가상자산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 4. (생략)
 -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 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

- (이상거래 감시) 자본시장법상 이상거래의 정의를 준용

< 자본시장법 사례 : 이상거래 감시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5조)** 법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 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 2.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예외)** 형사처벌 대상인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고 별도 집행 불필요

- ☐ **(이상거래 감시의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 >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자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 금감원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하여 담보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 금감원을 통해 회사의 법규 준수 등 점검할 계획

3. 종합결론

-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동 규정 추진 필요